

社說

재단 혁신은 피할수없는 과제 「범동약 모금운동」제안을 지지한다

한차례 회오리로 아직도 뇌리 에 명자옥이 남아있는 8·31동국 사태이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국대중심부활과 자주혁신의 의지는 이제 재단의 혁신을 당면 과제로 올려놓고있다.

현재 재단도 황진경 재단이사장이 승인 취소됨으로써 재단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무능력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교가 점점 퇴보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재단은 어떠한 개혁의 노력을 했는가. 주체로서의 소명감을 갖기보단 눈앞의 이익을 쫓고 안일무사한 태도로 일관하였 으며 따라서 현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동국의 자주와 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제안한 재단혁신 4개항목은 본교의 부흥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침체와 발전의 전환기에 놓인 현시점에서 불태 혁신 재단의 탄생은 피할 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하루빨리 면모를 혁신하고 건설적인 재단으로 태어나야 한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중생제도실현의 본교의 전학이념을 구현하고 재정부호의 위임을 극복하여 본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공정한 기질을 갖춘 재단이여야 할 것이다.

무작위 선출방식은 안된다

음성적 총장선거운동 지양해야

대학을 살아남아라고 한다면 그 정점은 총장이다. 이 총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뒷이야기 들이 무성하다. 물론 불공평보다는 심중이 앞서고 있고, 비약된 가 설들도 있을 수 있으나총장선거에 대한 모든 과정이 폐쇄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가설들이 진실로 받아들여 질 수도 없다.

특히나 「현총장의 재임의도에 관한 설」은 그 진위를 가리기에 앞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어디서 흘러 나왔는 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는 모르나 분명 지금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현총장이 자신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한마디의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결국은 「재임의도 설」을 더욱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더 많은 얘기는 수면에 잠겨 있다. 어떤교수가 새로 총장후보로 나설 것이 며, 어떤 교수가 지지세력이고 무슨의도를 가지고 있다는등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자명하듯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은 지금도 절정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 고 있다.

선거는 불명부당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더구나 「총장선출제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것은 범어사 30만평등 종단분규로 잃 어버린 재단재산을 되찾고 빈약 한 재정구조로 인해 온갖 부정비 리를 일삼아 온 반 학자부패력의 준동을 막는 일이다.

혼란과 위기속에서도 각 주체 간에 이러한 지상과제를 위한한 채 대립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음 은 한심한 일이다. 1백년 성상의 위대한 동국 건설을 핑계치고 눈 앞의 떠만 보고 경거망동하는 작 태는 청산해야 한다. 교수 학생 직원을 비롯한 동문, 불교계를 종 망라한 범동약 개혁의지가 하나 나로 뭉쳐져 일차적으로 재단 혁신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날 국을 동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날 바꿈시켜야 한다. 어느 한 단계 가 앞서서 끈다고 혁신이 성취되 지는 않는다. 대동학우들의 무관심, 교수회의 비협조적 행동은 마땅히 일소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풀어나가는 실천적 의지를 보일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 대위에서 제안한 「재단 혁신연합 회의」구성과 범동약적 모금운동 제안은 재단혁신의 연대의 틀을 확보하는 한편 재단의 위약감을 인식시키고 이를 2만동국인과 8 만여 동문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의지를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안」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 에서 일부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은 최소한 교수들 스스로의 학자적양심에 의해 지양되 어야 한다. 그에 앞서면 음성적 선거운동은 방지할 수 있는 율바른 총장선출제도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 선출제도에서는 학내 각 주체가 공히 참여해야 함은 물론, 선거의 전과정이 공개리에 진행 되어야 하고, 후보자에 대한 객 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수회에서서 대 두되고 있는 「무작위 선출방식」은 음성적 선거운동을 방지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 장할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당일 에 가시적 구체적 인물이 부상할 수 밖에 없어 제도 못지 않은 인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인 물문제에 소홀한 「무작위 선출방식」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간의 업적과 학식, 덕망 그 리고 동대를 이끌어 갈 지도역량 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어야 할 선거가 일부의 음모에 의해 파란 피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파행적 체제를 구성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며, 지분이라는 반대급부를 노려 지지하는 행위도, 모두 학 교를 더 파란의 길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각성해야 한다.

문교부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 教育部門修正計劃(1989~1991)에 따르면 문교부는 대학관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즉, 대학을 효율 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에 대한 통제와 지시·감독을 최소화 하고 자율적인 규제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의지와 계획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판단이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 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대학의 자율화가 말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6차계획이 시작되는 1989년 즉 금년에는 오히려 대학 에 대한 문교부의 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는 강한 인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전례없이 강화되었다는 인상을 떨 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문교부의 강력한 감사의 현상은 놓고 볼때 이는 자기의지와 자기행동의 모순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분명한 것은 시대착오적, 역사적 역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교부의 사학에 대한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사회의 공익으로서 사학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즉, 사학의 교육이념이 국가 이념에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모조였다. 둘째, 국가발전의 전진에서 사학으로 하여금 그 기여를 증대시켜 국민복 지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학 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및 감사는 사 학의 자율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 기 보다는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다. 셋째, 자율을 위한 계획의

는리에 따라 보다 높은 차원의 자 율을 추구하고 사회정의 실현하 기 위하여 자율을 제한하거나 합리 적 통제 및 감사의 실시는 자유방 인에서 초래되는 무질서가 크나큰 위험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 에

본교의 강화로 사학의 창의적 발전 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어느모로 보 나 불필요한 일이고 비능률적인 처 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립대 학은 거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

%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위원 회는 정부와 대학간의 방과제로서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과 업도 수행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립대학이므로 사학의 재정난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불태 4년제 대 학 전체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사학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와 인재를 배출함 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막대하다. 이러한 사학에 대한 지원·조성은 못할망정 통제와 감사만 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 다고 하겠다. 사학의 재정난을 뻔 히 알면서도 배고파 우는 아이격인 사학에게 딱 하나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 매치고 저리 던지고 내 동맹이 쳐버리는 문교부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사학이 절대적인 자유 를 누리야 된다면 문교부에 의한 일체의 통제 및 감사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홈볼트시대의 고독과 자유의 이념은 크게 수정되고 있으 며 사학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기관 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감독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은 긍정할 수 있다. 문제는 통제 및 감사만 강화하고 조정은 지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사학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1970년 대까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규제 와 통제 일변도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사학의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다소 개선되는 인상을 주었으나 그 지원의 대부분이 시설확충을 위한 용자일뿐 또는 교육차관이고 이자 보전이나 국고보조 등 시설확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 사학공공의 설치, 사 학육성법의 제정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라도 대학교육의 3/4 을 점유하고 있는 사학에 대하여 통제 및 감사만을 고집하면서 조성 을 의면할 수 없는 것은 논리의 귀 결이라 하겠다. 앞으로 제6차 경제 사회발전5개년계획 교육부문-정책 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시대 적 당위임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1362호로 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을 보면 그 상황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의 예산은 회 회계년도 개시전에, 결 산은 회 회계년도 종료후에 감독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요청· 회계규칙 등은 문교부 장관이 정한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학생

한국의 私學은 "배고파 우는 아이"



鄭鎭環 (사법대교수·교육행정학)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사학의 수가 늘고 그 질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만으로는 사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뿐더러 자율의 한계가 드러 나고 통제 및 감사를 필요로 하는 사학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필요

대학의 자율성 신장은 시대적 당위 국고지원 미약... 감사만 남용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감사만 제정 을 지원해 주었다면 그렇게 투입되 는 제정의 효율적 활용여부를 보장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의 연구소에 대 한 재정지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대학보조금 위원회(University Grant Committee)를 1919년에 설립한 이래 별로 하지 않은 처지에서 일방적인

을 정도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법부는 17종에 달하는 법과 규정을 통해서 대학에 있어서 의 기회균등의 보장과 재정지원등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의 연구소에 대 한 재정지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대학보조금 위원회(University Grant Committee)를 1919년에 설립한 이래 별로 하지 않은 처지에서 일방적인

1362호로 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을 보면 그 상황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의 예산은 회 회계년도 개시전에, 결 산은 회 회계년도 종료후에 감독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요청· 회계규칙 등은 문교부 장관이 정한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학생

화염병사용 처벌법의 폭력성

지난 7월 7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화염병법)이 발효된 이후 이에 근거한 구속 자가 속출하고 있다.

화염병을 5·3동맹 사건(이 역 시 공안정국조성을 위한 고도의 조 작극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재판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을 계기로 5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가 결됐으며, 이 법안의 내용은 화염 병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 금형을,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 소지한 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 개조항은 법적 체계상으로는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입법배경·과 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정권의 민 주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의 측면도 적지않다 할 수 있다.

먼저 법체계의 문제를 보면 지 금까지 화염병을 사용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 집행 방정 등으로 처벌해왔고 또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 생케 한 자」라는 추상적 규정은 「인명살상」「재산손괴」등으로 구체 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죄형법정 주의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법규 남용의 소지가 많으 며 실제 치안본부의 적용지침에 있 어서도 「구체적 결과 발생의 유무

침 역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5·3동맹 사건(이 역 시 공안정국조성을 위한 고도의 조 작극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재판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을 계기로 5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가 결됐으며, 이 법안의 내용은 화염 병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 금형을,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 소지한 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 개조항은 법적 체계상으로는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입법배경·과 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정권의 민 주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의 측면도 적지않다 할 수 있다.

를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 다.

법 제4조의 화염병의 제조·소지· 운반·보관 등은 해석상 「법률의 예 비·음모」에 해당하는데 예비행위는 중대한 범죄(예컨대 살인·미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상의 원칙이라 했을 때 과연 화염병사용자가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범죄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화염병처벌법 발효를 앞두고 치안 본부가 일선 경찰에 시달한 적용지

는 민주세력은 모두 폭도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자행하는 것이다. 얼마전 설인준군 사건(이도 정확한 사실과정이 전제되어 사법판단이 가능하지만)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 에서 「윤리」의 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현정권이 윤리의 문 제를 거론하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부모형제마저 가져다 신고 해야함을 강요하는 국보법상의 불 고지죄를 늘 암송해대는 저들이, 수비기관 반민주적·반민중적 작태

를 보여온 현정권이 누구에게 윤리 를 들먹거리며, 누구에게 폭도라 말하는가 말이다. 현정권에 있어 화염병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폭도 의 상징이며, 화염병법은 다시한번 공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려는 고 도의 술책이요, 이데올로기 공세가 야기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 다.

박준 (법과대 법학과)



1990학년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모집

199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 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일어일문학과·사학 과·미술사학과

사회계: 철학과·국민윤리학과·연극영화학과·교육학과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 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 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통계학과·농학과·임 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 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가정학과·한의 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 어영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 민윤리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 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 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통계학과·농학과·임 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 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가정학과·한의 학과

(2) 시험내용:

①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 시험 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과목 및 세 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②제2외국어 부과학과: 인도철학과·국 어국문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한의 학과

③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독어·일 어·영어·한문·중국어중 역어(단, 법어 는 인도철학과·한문은 국어국문학과· 국민윤리학과·철(동양철학)학과에 한 함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89년 11월 15(수)~11월 22일(수)

나. 원서접수: '89년 11월 20(월)~11월 22일(수)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라. 시험일시 및 장소: '89년 12월 2일(토) 10:00 동국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2253·2254)

새로운 학문공동체의 모색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진통의 폭과 깊이는 아직도 그 모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의 역사는 왜곡된 한국근현대사의 노정과 함께한다. 따라서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자주화와 별개의 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학공동체, 올바른 학문공동체의 형성은 바로 올바른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역사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과학적 전망에 서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해 우리 사회의 저임금구조가 유지되는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디까지나 사상과 학문의 탐구라는 고전적인 이념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학은 진리탐구의 장이자 학문생산의 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이 탐구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가치중립적인 순수한 진리라는 것은 엄밀하게 존

중하는 것이 대학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은 봉건국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대학의 위상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학이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그 주역이 능이 변화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이 보다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진리탐구라는

며, 또 대학의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라는 것은 개인들의 생존 내지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규범의 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제도의 자율성이란 곧 그 제도를 이루는 가치·규범 체계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이를 역으로 표현해 본다면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그 제도에 의해 규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학의 운영에 정치권의 논리

배임의 억압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보수적 내지 체제옹호적 요소에 의해서도 구속화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의 각 주체들(교수·학생·직원)은 스스로 자기생존의 노력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올바른 학문생산의 주체로서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위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만이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구성원들은 대학 운영의 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진리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존재의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심는차례

1. 한국대학의 모순구조
2. 중립대학으로서 東大의 문제
3. 민족대학의 위상과 과제
4. 건학이념의 올바른 구현
5.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며

주체의 모든 권리는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고르게 확보될 때만 가능하다. 교수권과 학습권은 민주교육을 이룩할 수 있을 때만이 민중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가 지

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찾아낸다. 대학은 연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점이 대학교육을 일반교육과 구별하는 다른 점이다. 대학이 본래 연구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기존학설이나 개념에 도전할만한 학생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비판이나 대결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은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학생 역시 학문연구의 주체인 것이다. 이때, 학문연구의 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변혁적 과제와 전망으로부터 제정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기존의 학문체계에 대한 비판적 대결을 통하여만 획득될 수 있다. 즉 제국주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후방을 입고 도입된 제국주의 학문이, 보편성을 명분으로 하여 피지배주의 민족을 문화적 노예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학문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도입된 학문이 「학문은 목전의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을 강조하면 할수록 식민지, 신식민지의 적나라한 현실은 그 학구성을 폭로할 것이고 학문의 자기변신을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 학문이 해당 사회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성실하게 접근하며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자기변신이며, 궁극적으로는 외세의 문화적 식민주의의 대리자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학문 내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은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갖는 함축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적·민중적 학문의 건설이라는 학문의 자기변신의 요구는 민중이 자기행방의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할 때만이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실천적 학문연구라는 과제를 던져 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사회 내부에서의 치열한 이론투쟁과 올바른 사상적 기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이 학문공동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민족민주운동의 일반적 과제와 결합할 때만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공동체라는 위상속에서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미의 학문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대외적 자율성 확보와 대내적 민주화의 성취, 대학교육의 이념적 인본·인본주의와 내용적 기술주의·실용주의간의 갈등해소, 수업·연구·교수·봉사 등 대학인부의 실천과 등의 과제는 실천적인 개혁을 향한 실천적 공동체성의 확보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다 하겠다. 더구나 올바른 학문생산 역시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서 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서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를 주제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율성 확보가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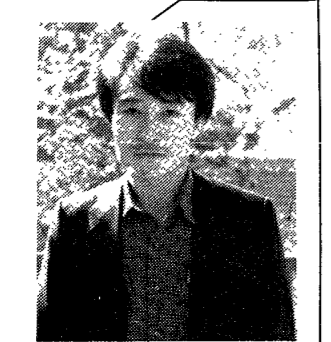


이만근 (대학원 철학과·박사과정)



대학이 올바른 학문공동체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어떠한 형태로든, 또는 어떠한 종류로든, 인간의 지적 생활은 모든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기에 각각의 세대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더불어 문화전승의 과정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대학은 이



이만근 (대학원 철학과·박사과정)

러한 지식을 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표적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제도화된 교육과 연구의 형태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과정 가운데, 사회자제를 변화시키며 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지식인 및 대중들의 삶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사회발전에도 공헌하도록 하는 「봉사」의 기능 또한 수행해 왔다.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의 주요기능은 대학발전의 긴 역사과정 가운데 대학 스스로가 형태화시켰거나 또는 대학에 부여된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이상의 훈련과 역사적의 함양에 무관심한 채 산업사회의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기능적 지식인의 양산에만 전념하는 것은 대학의 본래적인 존립의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은 언제나 자기 사회와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태도로 보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대학인의 노력은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기능적 지식 전수에 전념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대학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가치의 상품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이를 통해

학원자주

다섯번째

개발할 수 없으며, 인간해방과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원에서만 진리탐구는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의미의 대학은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근대국가가 건설되고 자본의 운동

가 개입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관과 행위규범이 대학을 특징짓는 제도적 요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

따라서 학원의 민주화는 새로운 학문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므로 대학구성원인 교수·학생·직원이 제각기 제 직능의 특성을 살리며 대학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직결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공유하고 과학적 방안을 공동으로 창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III

12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대학(universitas)이 출현한 이래 대학의 역사는 신·구 사회개혁의 갈등과 타협을 반영하면서 보수적 갈등과 비판적·진보적 학문이 병존해 왔다. 80년대 우리의 대학사회의 역사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대학공동체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 전체의 변혁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학이 올바른 학문공동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대학의 대외종속성을 탈피하는 문제에서부터 즉 민족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즉 지금까지

현실에 눈을 돌리는 방법론 지양해야

기존학설에 대한 비판적 대결실현

IV

교육·연구·학문의 사회적 역할이 세가지가 올바르게 통일될 때만이 학문공동체는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목적하는 바 학문의 연구, 교수란 안전한 태도에서 생산되어질 그런 것일 수는 없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존학설이나 기존의 관념만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대학은 항

기능적 지식인 양산 '나사못' 생산에 불과

법칙이 가치중성과 노동력 재생산의 새로운 단계, 즉 기계적 대량생산의 단계에 이르러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장악문제와 심각하게 결부되면서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19세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 의해 규정되었으 며, 이에 따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과 장소가 별도로 필요해졌다. 또한 과학이 생산과정에 적용되었을 때 그 기술을 응용할 인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기능적 요구에 대응해서 대학이 대량으로 생성되고 발전한 셈이었다.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는 정신노동으로 하여금 생산과정을 기획, 관리, 통제하는 전문관리공으로서 하나의 계층을 생성하게 하는데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공

대학이 자기위치를 정립할 때만이 그 정당성이 보장될 것이다. II 대학이 학문공동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핵심적인 기능은 우선 주어진 문화권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그 사회의 총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을 전수한다는 데 있을 것이며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기능으로써는 새롭고 진보된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의 기능이 지적된다. 교육과 연구가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의 두 핵심적 축을 이룬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가 자율성을 필요로 하

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흔히 연구 및 학문의 자율성, 즉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지식의 전수와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열려진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로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학문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어떤 기존의 신념체계나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지식인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비단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실에서 정당성을 갖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자율성의 측면에 갖는 중요한 의미를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율성의 상실이 대학 바깥의 권력구조나 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식민주의적 대학이념과 대학문화를 철저히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반민중적 체제에 봉사하고 순응하는 기능적 나사못을 양산시키는 우리 대학의 도구주의적 이념을 청산하고 깊은 역사인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인간을 창조하는 대학이념과 내용을 교육에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새로운 대학공동체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개혁은 대학의 직접민주주의의 체제의 확립으로 달성될 수 있다. 평교수 협의회의 의결기구와 더불어 학생회와 직원노동조합, 그리고 교수협의회의 연대기구를 통하여 학사와 대학운영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컬 수 있다. 세계, 통일을 지향하는 대학개혁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단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대학과 대학문화는 민족통일을 향한 민족대학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병행될 때만이 올바른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은 자기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연구·학문의 사회적 역할이 세가지가 올바르게 통일될 때만이 학문공동체는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목적하는 바 학문의 연구, 교수란 안전한 태도에서 생산되어질 그런 것일 수는 없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존학설이나 기존의 관념만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대학은 항

자대기런 공동기획광고1-전교조 지지

이젠 믿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내일은 노래부 아저씨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겠다.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안들어 주면 대통령 아저씨가 암만 "믿어주세요..." 해도 믿지 않겠다.

충북 J여중 1학년. 진미혜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자유언론실천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외국의 총장선거제도 사례

I. 문제의 제기

거의 모든 대학이 아직도 위기적인 상황속에 놓여 있다. 구조적인 갈등·대립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초에 문교부가 본교를 비롯한 5개 사립대 특별감사 및 경고·시정조치를 한 것을 계기로 위기의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 81개 사립대학 중에 10여개 대학 이상이 총·학장의 해임 및 교체문제를 놓고 흥분을 앓고 있다. 심지어는 한 대학에 두 명의 총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서로 및 직무대행의 파행적 학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진통과 갈등은 대학사회의 인위에서 요구되는 민주화·자유화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대학사회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의견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격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총·학장선거문제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동약의 언덕에도 총장선거제도를 놓고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각 주체들간의 대립·갈등은 2학기에 들어서서 부정입학 사태를 계기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II. 전대학인의 총장선거 참여의 필요성

1. 대학자치의 원리: 이론적 근거

총장선거에 동약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는가? 이 이론적 근거는 대학의 본질과 대학자치의 원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은 학문의 자유(제22조)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제113조항).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 보기 어려우나 이는 종래의 심각한 대학자치를 침해에 대한 반성적 표현으로 보여진다.

대학자치를 실현케 하는 나라들의 선례를 본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의 자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①대학인사의 자주성 ②대학행정·관리의 자주성 ③대학의 시설물의 관리나 학생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자율성 ④교육·연구의 내용·방법의 자주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자치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인 교권론의 대두와 함께 교수회가 주체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교수회자치론에 대해 서구의 대학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개혁론이 대두되어 학생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도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학의 민주화·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참여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타당하다.

또한 주체적인 참여로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자기책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가의 문제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치를 뜻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치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사회로부터의 자율을 그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대학자치의 전통적 구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미국·일본등 세계적으로 확산된(대학개혁)운동을 통해 이념과 제도면에서 큰 갈등을 겪게되었다. 그 갈등의 핵심은 학생의 학사행정·관리운영의 참여문제였다. 이는 교수회자치제에서 나타난 부정·부패·모순의 극복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학생대중의 지위도 학문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주체적 자주성을 갖는 것이 지극히 단순한 사실의 이용·자교육의 대상으로서 관리되는 자가

들면, 모든 협의회·위원회에서 교수, 학생, 연구원 및 조교, 사무직원의 대표비율은 7:2:2:2로 되어 있다. 대학자유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수회 뿐만 아니라 학생·사무직원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총·학장선거에 참여해야 할 당위론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당대에 맞지 않는 윤곽의식(剛性意識)이나 봉건적 교권의식에서 탈피하여, 민주시민양성의 요람으로 대학을 지켜야 한다. 학문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인

와세다대학의 총장선거제도는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1969년에 총장후보자에 대한 학생의 신인투표를 허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와세다대학은 3단계로 총장선거가 실시된다(이대학 학칙제 8조에 근거한 총장선거규칙 참조). 제1단계는 후보자선거로 교원(전임교원 및 조교)전원과 근속5년이상 또는 만25세이상의 전임직원 및 학의 평의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득표수인 5인 이상의 유효투표의 20%의 1인 이상을 얻은 사람은 총장후보자 된다. 제2단계는 학부·대학원 학생들만 참여하는 신인투표(信認投票)를 실시한다. 이때 후보자의

조교20명, 사무직원 20명의 각 구성원 대표들로 된다. 물론 이 협의기관은 총장선거의외에 학칙제정, 연구·예술발전계획 등의 결정권을 가진다. 60년대 후반의 서독에서는 전통적인 도제제도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타파하고자 학생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 무렵 서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32세의 조교 크라이비히가 임기 7년의 총장으로 선출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간접선거에 의한 총장선거방식을 가지고 있다. 총장추대위원회나 총장

총장선거제도-항후과제와 전장-등대신문, 1025호 6면 참조). 위의 대학들 가운데에서 고려대의 총장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이러한 고려대의 학내분규는 지극히 단순한 요구사항에서 출발하였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선거'를 요구하면서 『교수협의회의 직선선출』로 선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항의하면서 실력행사까지 발전되었다.

결국은 변칙적인 선거를 통해 교수들이 『보수대연합』으로 밀어 부쳐 총장을 선출하여 문교부의 승인과 재단의 임명절차를 거쳤으나 임기 3개월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성원들의 평가와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대학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본의 선출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견수렴이 민주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학의 각주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여론수렴위원회(세종대모형))나 (후보자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우리대학을 중흥시키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역사적식을 가진 후보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임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의·타의로 등락된 후보자들의 추천권, 경락, 소신, 포부, 주요업적등이 공개되고 선출되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같이 수렴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수회에서 비·보·보·적·적·평등선거에 의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1인을 선출한다. 셋째는 총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선진제국들의 대학제도의 개혁은 대학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대학자치와 민주화를 실현케 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총장선거에 있어서 대학인의 공동 참여는 세계적인 조류이다. 낙후된 대학을 일으켜 세우자면 보다 진취적, 창조적인 민주화·자유화의 모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좀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열린마음을 교수들 스스로 보일때 다른 대학구성원(학생·사무직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내의 발전을 꾀고 갈등·대립을 극복하면서 대학사에 새롭고 같은 방안이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첫째는 총장후보자에 관한 각 주

자주적 개혁위한 '민주적총장' 선출



延基榮 (법과대학교수·민법)



우리는 지금 각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총장선거제도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가운데 중요한 것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관리운영의 주체로서의 사정권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화의 내용으로는 총·학장선거,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생활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입법례는 서독의 '대학기법법(Hochschulrahmengesetz)'을 들 수 있다. 1969년 5월 서독 기본법(Grundgesetz)을 개정하여 연방의 대학기법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6년 1월 '대학기법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이법은 각주에 직접적인

한약과 엄격서등을 공개하며, 이투표에서 50%이상 신임을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선투표에 계속 임용후보자격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결정투표(決定投票)로서 7개학부에서 전임교원 및 조교에 의해 선출된 50인, 직원에서 선출된 1백50인, 학의 평의원 및 학의 상의원(學外常議員)전원

등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총장으로 선출된다. 2. 독일 독일은 주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국립대학제도이지만 전통적으로 대학의 자치가 최대한 보장되어 있다. 총장선거는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수·학생·사무직원과 연구원·조교등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선거회의나 협의회에서 간접선거방식이 일반적이다. 해센주의 대학들은 교수와 학생·조교 및 사무직원들이 각각 1/3씩 참여하는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북부의 대학들은 대개 중앙협의회에서 총장을 선출한다. 그 구성은 교수70명, 학생20명, 연구원 및

물색위원회가 교수·학생·직원·재단·지역유지·동맹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엄격한 심사와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V.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을 바라면서

위의 외국대학의 총장선거제도는 전통적인 대학제도를 개혁해야 한

각 주체의 자주적 참여 통해 제도화 신인투표-추천위-선거협의회의 등 다양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제정·개정으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법에서는 「대학구성원은 대학에 본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동등한 학생이다(제36조)」라고 전제하면서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37조)」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각 대학의 협의회, 위원회, 평의회에 일정비율로 학생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학교와 기구의 성격에 따라 참여의 구성비율이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수대표가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학생·연구원 및 조교, 직원 등의 대표자가 균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괴팅겐대학의 예를

2. 현실적 근거

그 동안 총·학장선거를 계기로 교수·학의의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총장선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려대의 경우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들만의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하여 문교부의 승인과 재단의 임명절차가 끝났으나 결국 다른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임하고 말았다.

III. 외국의 총장선거제도

1. 일본 일본의 명문사립대학중의 하나인

한단계 대학사회에는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독점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혁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대학의 주체들이 함께 토론하고 더불어 가르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수가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총장선거를 할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는 대학의 자유화·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첫째는 총장후보자에 관한 각 주

지난 17일 밤배동 '한방병원 개원식'은 분위기에 들뜬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날씨가 맑아 유난히 밝은 전형적 가을이었으나 어둠의 시대를 장식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총장의 축사와 병원장인사등을 모두 마치고 식장을 빠져 나오는 사람중에는 부총학생회장 윤영현(독문4)과 총학기획부장 김봉준(야간·경영4)군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씨가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의 틈사이로 기획부장 김봉준군의 비명소리와 함께 윤영현군의 고함소리, 참석자들의 외침을 듣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이게 뭐 하는 것이요?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학생에게 이렇게 막 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영장이라도 보여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부총학생회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김봉준군은 총부서 행사 7-8명에게 둘러싸여 발등을 뒤뚱던채 그들이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로

떨어져 갔다. 중부서 행사중 한명은 『영장은 무슨 영장이냐 수배가 내렸으니 머리가 개 당당하지라며 으르렁 윙크를 던지며 주먹을 휘둘렀다. 강제로 사람들을 밀치고 차에 오른 형사들은 차에서 계속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윤영현군과 본사취재기자 및 몇 명의 직원들을 향해 차에 시동을 걸고 달려 들었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김은길씨는 『아니 이

게 무슨 경우에 없는 것이냐며 땅에 앉아 통곡을 해 주위사람들까지 숙연해지기도... 그러나 언제나 학생들의 앞에서 주체라고 주장해 왔던 몇몇 교수들을 비롯 한 학교측 관계자들은 서로 멱적듯 얼굴만 바라보며, 으르렁 중부서 행사들과 눈앞까지 나누기도 해 주위에 물러든 동태사람들보다 더 외면을 하고 있었다. 윤영현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탄압이 더욱 강고히 대처함은 물론 총학생회도 비정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 총학의 혁신을 기대하겠다.』

우리는 거강한 광고를 듣고 싶습니다

—광고담당인 더 이상 광고계약을 지연하지 말라—

학원의 주체를 올바르게 세우려는 학원자주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동대신문은 이제 대학신문의 주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광고지연 현상운동을 결행한다.

대학신문 전체지면의 1/3을 차지하는 광고지연은 그동안 독자들이나 신문제작의 주체인 기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해 왔다. 대학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의 내용은 대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대학과 대학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는 신문전체에 책임을 진다는 새로운 결의로 광고지연의 혁신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광고지연에 대한 결정권 역시 편집자로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기존 광고대행사의 경우 이윤추구를 최대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속성으로 인해 대학신문의 광고면은 무분별한 소비와 향락을 부추기는 퇴폐문화의 선전장으로 악용,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해왔다. 따라서 기자들은 대학신문의 광고질서회복을 목적으로 건전한 자본과 인자들로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학사와의 세계적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는 광고지연의 혁신과 아울러 광고수익의 대학 환원과 대학신문기자연합의 광고질서회복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바른 길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측은 기존 대행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대행사가 신구기업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대행계약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신문제작의 주체인 기자들의 편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근본을 축적하지 못한 신규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모순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동대신문 기자들은 올바른 광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편집자로서의 예산자율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한 교두보가 될 광고지연현상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파행적 광고계약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東大新聞社 기자 일동

총발행일인 45년 10월 25일

형형색색 팸플릿과 함께 각 단과대에서는 「학술문화제」의 열기로 떠들썩하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문과대 학생회주최 「명진학술문화제」가 교내일원에서 열린것을 비롯,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는 야간강좌 학생회주최 「남산골 한마당」이 지난 23일부터는 이과대 학생회주최 「동리제」가 열리고 있으며, 오늘(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법과대 학생회주최 「법학제」 농과대 학생회주최 「풍년제」 사범대 학생회주최 「학림제」가, 마지막으로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과학대 학생회주최 「능금

천 8백여 야간강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지 못한 점 등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남산골 한마당」을 지켜본 박종면(야간강좌 경제2)군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제문을 갖는데, 중견의 일반화를 이용한 특정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리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농과대학생회주최 「풍년제」

변과 및 교육과정 등에 사범대의 위상과 역할·사범대의 목적적이라는 주제로, 임용문제에 대해 양성기관 논쟁·지역부여 논쟁·의무병행제를 주제로 각 각 심도깊은 연구성과를 발표

노래를 배울 수 있어 학생 대 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범대 학림제의 경우 자체모순 을 극복하려는 준비들이 돋보 였는데 학림제의 개막 의의를 사범대 학술부장 김은주(역사

달하나 千江에

中央銀行 독립

權五哲
(경상대교수·거시경제학)



최근 中央銀行의 독립성에 관한 논의가 政治家, 學者, 韓國銀行, 財務部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中央銀行의 독립성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中央銀行인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면 통화정책이 안정되고 금융질서가 건전해 질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 정치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통화가 남발되거나 자금의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의 가치도 불안정해 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치권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中央銀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原則에는 異議가 없지만 그 方法論에는 爭執가 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의견이 각 각 다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를 이해당사자인 재무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政治家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여기에는 금융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그것도 몇몇 사람의 의견만을 들어서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금융전문가 및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토론한 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질서를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 및 외부의 압력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고 중앙은행이 政府로부터 독립하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처럼 第四部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중앙은행이 수립하고 집행하는 通貨政策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政府의 전체적인 경제정책과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中央銀行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비상근으로 하지 말고 상근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한 후에 통화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따 저따에서 여러 가지 일을 걸치면 시간과 인력,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을 不安정하게 될 것이다. 中央銀行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상당히 중요해 지는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비상근이어서 되겠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또한 금융감독체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금융감독체제에 대해서도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견해를 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체제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機能別로 감독체제를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독체제에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의 완전독점보다는 상호 견제함으로써 均衡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명진학술문화제」등 총 7개 성황이뤄

단과대 학술문화제를 지켜보며

연간 단과대 학생회

사업성과물 외화의 場



▷제5회 동아리인 단결합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첫 행사

가요제가 24일 오후 2시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대체 「기획행사로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학우 대중들의 주제의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리제」에서는 「90세퀴즈대회」가 눈길을 끌었는데 1·2·3학년 각 1명과 복학생의 4명이 한조를 이뤄 90세이상인 팀을 꾸려 이색 퀴즈대회를 과학년 앞에서 가졌다.

법과대학에서는 오는 27일 「중견의 내주거려와 중·수취」를 주제로 제14회 형사모의

교과(과)양은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사범대 학술부와 교과위원의 유대를 통해 교진부·학자부의 대안을 독자적으로 내오는 틀을 마련해 이후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근거를 공급하고 학생들과는 학술적영역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가을에 1년간의 단과대 학생회에서 진행된 사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의화시키는 단과대 학술문화제는 단과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인 식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어지는데, 11월 초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1년간 단과대 집행부들의 사업 평가 단계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풍물패공연, 노래공연만으로 이루어졌던 단과대 학술문화제는 점차 사라지고 대학이라는 영역에서 내부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학생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학술심포지움 및 강연회가 학술문화제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대학인의 현실참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단과대 학술문화제는 더이상 소위지향적이었던 향락성 추세가 아니다.

단과대 학술문화제를 통해 전통학인은 단과대차원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결집된 역량으로 이후 학생회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박영민 記者)

문화기획

제」가 각각 개막식을 가진후 자체 행사에 들어간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명진학술문화제」는 「송구재」, 반석의 울 우뢰곡 등 일의 콘콜들이 함께 나아가 잠재상 건설할 젊은 일꾼들이 「를」 기지로 열렸는데 「명진학술문화제」 「학술심포지움」 「학술강연회」 등의 학술제적 성격과 「통일노래한마당」 및 선전선동대회 등의 문화제적 성격이 잘 조화된 행사였다.

특히 「통일노래한마당」 및 선전선동 경연대회」는 지난해 대 중적으로 진행했던 통일노래한마당을 선전선동 경연대회와 함께 진행했는데 건장하고 진정된 노래로 학생들이 함께 어울렸던 좋은 자리가 되었으며 이후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창조한 선전선동을 펼쳐나가는 데 의의를 둔 자리로 평가된다.

지난 22일 막을 내린 「남산골 한마당」은 「전교조사」를 내용으로 한 집체극과 민중가요 경연대회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민중가요 경연대회」에는 당초 7개학과에서 2팀씩이 출전하려 했으나 13팀이 무작위로 출연해 경합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산골 한마당」은 나흘간에 걸친 콘서트였으나 1

당신의 생활은 어디

하나 둘 중상을 맞아가네. 우리같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목욕의 단풍마저 어수선하게 느껴지는군.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머릿 전 채용공고를 보기 위해 신문은 뒤적이다 잠자기 채증이 아닌 기사를 보았다. 바로 「시위경력자 채용거부」라는 제하의 기사였다. 그때 자네가

모든 반민주적 만행과 폭압은 있을 수 있는 필요악으로 교육받았지. 대학의 첫 발을 자네와 함께 내뼌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학 후 우리는 뭔가 주눅이 든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어. 교정 곳곳의 번뜩이는 눈초림이 바로 그것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자네와 짐으로 들어가던

들 중 중요하며 울고 말았지. 아마 자네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 일거야. 독재권력이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도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는 없다며 무생하는 학우들의 대열에서 자네를 발견할 수 있었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다시 공부에 열중하던군.

여러 계절이 지나고 자네를 다시 만났을 때, 몹시 흥분해

고 시위경력자가 되었어...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었던 거야. 독립자본가들이 그들과 한패가라는 것을. 그들은 조금이라도 민주적 의의를 가지고 있거나 자네와 같이 순박한 애국시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네를 낯선고 독점 자본가들은 자네의 생존권을 발달하는 그때 거리들과 장단을 찍적 맞추고

있는 모양일세.

자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마 내 생각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세대는 조직적 투쟁에의 경험과 승리의 확산, 그리고 다가올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에의 전망으로 무장되어 있지

독점자본가와 군부는 한 통속

「사회에서도 동지를 잊지말게」

생각났네. 물론 그 작자들에게 내한 배신감이 일어난. 결코 내할지않은 감정이었지만 어느새 잊고 있었던 모양이지.

우리의 학창시절은 참으로 혼돈했지. 성장과정 내내 군사독재의에는 경험한 것이 없었지. 그들에 의해 지질러지는

중엔 아주머니의 비명을 들은 것은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리었나? 아나 노년층의 가슴팍으로 건장한 철거민들의 발길질이 내리치고 있었지. 자네는 달려들더군. 그리고 몇 시간후 우리는 여기저기 외산이 들어 그 아주머니와 그들

서 내게 고향을 찾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저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부정부패에 군고에 불법부금에 학원사찰에 열안이 되어 있다고. 한 술 더 떠서 미국놈들 앞잡이 노릇만 더 하고 있다고. 또 자네는 거리로 나서더군. 그리

참 교육의 함성으로

노병호 (이과대 경제학과)

문화단신

연우영화교실

극단 연우무대에서는 오는 12월까지 매일 1회, 강연회와 세미나를 주축으로 「영화교실」을 개최한다.

해와동 연우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교실은 세계4대 영화제수상작을 중심으로 해 허리우드영화를 소개하며, 이번 달에는 25, 26일 「Alexander」, 27-28일 「Man of iron」, 29일 「The fattle of Algiers」, 30일 「1900」, 「Alexander」, 30일 「Man of iron」을 각각 상연한다.

소설제

기숙사 학생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안양동 기숙사에서 Open house를 개최한다. 기존 선배님들의 많은 참여바람.

낭독봉사자 모집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시각장애자들의 복리증진과 재활교육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교양도서 및 전문서적을 낭독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복지회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동약 廣場

기사단

민족미학가을학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미학연구소에서는 오는 11월22일(가)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우리시대 민족예술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민족미학가을학교」를 개최한다.

80년대 민족예술의 총체적 진단을 하게 될 이번 강좌는 오는 25일(가) (황무시), 31일 음악(노승은), 11월1일 영화(장성우), 7일 미술(유홍준)등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2만5천 원.

소설제

기숙사 학생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안양동 기숙사에서 Open house를 개최한다. 기존 선배님들의 많은 참여바람.

낭독봉사자 모집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시각장애자들의 복리증진과 재활교육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교양도서 및 전문서적을 낭독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복지회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DUCA전시회

「제5회 DUCA프로그램전시회」가 25일부터 열려 오는 28일까지 삼보점점, 대우전자등 특별전시장에서 실시된다.

노점상사전진

홍사단(가)카데미에서는 노점상·공무원 사전전을 오는 26일까지 학생회관에서 갖는다.

동·연농구대회

동·연세 농구대회가 이미추

타자실개방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타자실습을 위한 타자실(도서관지하)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2일 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교시를 제외한 전시간에 개방된다.

타자실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타자실분유를 위해 1천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후문앞 일방통행 철저히 관리하기를

후문앞으로 통학하는 많은 학우들중의 한명으로서 느끼기가 있어 이들을 돕는다. 후문으로 등·하교를 할때면 너무나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

가득이나 비좁은 길에 버섯이 주차해 있는 차가 있거나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내려오던 차에 올라가던 차가 서로 마혀 그 사이로 비좁고 다니기 일췌이다.

더구나 클랙션을 울리며 절주하는 차들을 볼때면 동공이 오색해진다.

학생들을 위해 학부에서 야드라이프를 고용, 후문앞 교통관리를 실시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이 방학중

에만 실시한 일시적 방편이었 던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의면하고 자발기운이나 매정인수에만 매달리는 학부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세를 느낄 학우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메일같이 다가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금 학부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김태수
(법과대 법학과)

찾은 분실사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요즘들어 동아내에서는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학생회관에 있는 써클 룸에서는 분실사고가 잦아 들 건물들 제대로 두고 다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내

어만 실시한 일시적 방편이었 던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의면하고 자발기운이나 매정인수에만 매달리는 학부의 모습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세를 느낄 학우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메일같이 다가오는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금 학부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김태수
(법과대 법학과)

찾은 분실사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요즘들어 동아내에서는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학생회관에 있는 써클 룸에서는 분실사고가 잦아 들 건물들 제대로 두고 다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내

동약 기자석

년인 경우 개인적인 취업문제라든지, 졸업에 관해 해결 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고 기타 학원들도 시험이나 기타 사적인 시정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학교상황은 너무 열악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단체의 대표 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구성원들을 주도하지 못하는 관적으로 대의원회등 각종 회의는 무산되기 일췌이고, 지금 열리고 있는 단과대 학술제나 동연세의 준비과정·내용이

꿈은 소리 한마디가 자주동악을 건설합니다

동약기자석은 전통악인인 공동체의 생활속에서 꿈 같하는 바를 독자여러분이 직접 기자가 되어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서관의 물건분실, 교내제일, 주체간의 마찰·의견대립등 건의 또는 제언으로 2만동약인에게 돌려 주십시오. (월고지 2~3매가량)

※기타 문의는 동대신문사 문화부로 하시기바라며 제 때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文 化 部

